

# ‘재생에너지 중심’ 전남…‘기후에너지부’ 유치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 간담회서 지역 에너지정책·당위성 등 설명  
해수부 부산 이전…지역 균형발전 차원 빛가람혁신도시에 신설돼야

전남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신설이 예상되는 ‘기후에너지부’ (가칭) 전남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목포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간담회를 열고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과 목포 신항만을 둘러본 뒤 가진 간담회에서 전남이 재생에너지 중심지임을 부각했다.

전남도는 전남의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법,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제도 개선 등의 건의사항도 전달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전남도의 고민과 노력 등을 피력했다. 전남이 현재 전국 해상풍력 발전 허가 용량의 61%인 18.7GW(기가와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까지 30GW 보급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 3배 정비, 지방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모델 마련 등이 입법과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국회입법조사처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며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전남 조직이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설된다면 에너지 수도 전남에 유치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에 대해 “AI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는 국정과제이자 전남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다부처와 연관된 사업이므로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입법·제도화되도록

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 공약에 포함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밝힌 상태다.

기후에너지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문을 열 것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도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에너지부만틈은 전남에 와야 한다는 지역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전남이 새정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최적지”라며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가 위치한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기후에너지부 전남유치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이 기후에너지부 유치의 객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176GW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에너지고속도로’ 중심지 역시 전남이다.  
또 전남은 아시아 태평양 최대 3.2GW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과 영농형 태양광, 전국 최초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6개 광역시 최초

광주시가 6개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획득했다.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인증을 받아 아동친화정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비차별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견 존중 등 4가지 일반 원칙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상위인증은 ‘최초 인증’ 후 4년간 아동 관련 정책에서 성과를 낸 지역에 부여된다. 이번 상위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2029년 6월까지다.

아동권리 실현과 정책 제도와, 아동참여 보장, 아동권리 교육, 옴부즈퍼슨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체

계화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아동의회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69건의 정책 중 약 68%인 47건이 시정에 반영됐으며, 아동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참여예산제 사업도 총 17건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봄비’와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아간·휴일 소아진료 확대, 삼삼오오 이웃돌봄, 출산맘 나눔가게, 광주형 G-패스 교통비 지원, 아이키움 플랫폼 운영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을 펼친 것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상위인증을 계기로 ‘아동시민의 권리를 모든 시민이 존중하고 실현하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아동친화도시 비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교육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광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2026년~2029년)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광역자치단체 아동친화정책 선도모델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북구 인구정책·저출생 대응 민간추진단 발대

23일 광주 북구 행복아울림센터 강당에서 인구정책·저출생 대응 민간추진단 발대식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민간추진단위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인구정책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령주 기자mjna@kwangju.co.kr

## 전남도의회, 이순신대교 국가 차원 관리체계 전환 건의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간담회

전남도의의회가 유지 관리비에 한 해 50여억원이 투입되는 ‘이순신대교’의 국가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의의회는 지난 19일 이순신대교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이순신대교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강정일(민주·광양2), 최무경(민주·여수4) 전라남도의원과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 도로 정책 관계자, 서병철 순천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국가산단의 물류 기능을 지방이 감

당하는 구조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해당 구간의 지정국도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해왔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과 지정국도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산단 물류 기능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남도의의회에 따르면 이순신대교는 지난 2013년 준공된 2.26km 현수교로, 여수산단과 광양 산단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순신대교 유지관리에 투입된 비용은 515억원으로, 전남도가 33.3%, 여수시

가 42.7%, 광양시가 24%를 부담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순신대교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이순신대교의 국가관리 전환을 건의하고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권항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이순신대교는 수조 원의 국세를 창출하는 핵심 물류망임에도 여전히 지방도로로 남아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반려견 등록은 ‘의무’…광주시, 7월 집중 단속

과태료 최대 100만원

광주시가 7월 한 달간 반려동물 등록제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까지 시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지역에서 시행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 등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로,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구에서 지정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이후 반려동물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등록동물을 분실해 되찾은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등록대행업체 조회 및 소유자 변경신

고 서비스’와 정부24의 ‘소유자변경 신고 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구청을 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광주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에 대해 등록비를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는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마친 시민은 신청서를 등록 대행업체에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다중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환연)이 23일 “목욕탕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환연에 따르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급성 호흡기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에 걸릴 수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직경 5μm 미만의 물 입자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질 때 이를 흡입할 경우 감염된다.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고, 주로 물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감염이 일어난다.

보환연은 여름이 가까워짐에 따라 대형 건물과 대형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에 민감한 이용자가 많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이 검사에 나선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료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